

▶ 매일 INDEX



3면

“양곡관리법, 내년 설 명절 전 통과 예상”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음 10월 1일) 제3125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제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 농촌 관계인구 ‘주목’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4월 기준 전주 제외 13개 시·군 ‘소멸위험’

형성부터 활성화까지 단계별 정책 구축 필요

전북도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관계인구’를 활용해 농촌을 활성화하는 제언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계인구의 개념과 정책과제를 통해 ‘관계인구’를 활용한 농촌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기준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구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는 농촌관광, 체험, 도농 교류, 귀농귀촌 등과 같이 농촌과 관계를 맺는 도시민인 ‘관계인구’에 주목하여 2021년 ‘관계인구’를 활용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전북도는 관계인구정책 방향으로 ‘농촌에서 도시·도시민까지 확대하

여 도농융합 상생분야에 대응, 단순 방문에서 관계형성, 관심방문·지역인재로 관계 확대, ‘고향시평가부제’에 대한 지역홍보, 관심도 제고,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설정하고, 자매결연, 가족과 함께 농촌살이, 워킹홀리데이 등 전북 생생미를 청년아카데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연구위원은 도시민의 관계인구 확보에 중점을 둔 전라북도 관계인구정책을 도시민의 지역 관심과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단계는 관계형성단계, 2단계는 관계 성장단계, 3단계는 관계활성화단계로 단계를 거치며 점차 짐작적 정주인구로 성장하게 된다.

/김경수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범국민 운동 전개”

공동대책위 출범·서명운동 선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인원 10개 단체와 참여단체 122개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인정적인 확보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인식하고 평화로운 학교 환경 속에 성장해 가길 바란다”며 “지역의 교육 상황 분석을 통해 과대학교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인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에 범국민 실천을 포함한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의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24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인한 10개 단체와 참여단체 122개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이 열렸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0개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그리고 교원단체 제안 이후 123곳의 참여단체와 함께 출범한 범국민 시민단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통해 인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무주군의회의 또 다른 이름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
정치가는 다음세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또한 도시민의 생활양식 변화와 대안적인 삶 추구를 반영하여 이들이 전북 농촌에 관심과 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농촌 마을에서 일과 놀이·관광·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농촌 삶의 질 증진 관련 도시민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공간’이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북 이노베이션 스페어스’ 등의 새로운 정책사업을 조원지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조원지 연구위원은 “전북농촌에서 출걸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관계인구는 전북 농촌의 가치와 문화를 도시민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이다. 도시민과 전북 농촌이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관계인구 증가는 전북농촌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향후 이주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증가를 의미한다. 전북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관계인구가 증가한다면, 전북 농촌은 도시민에게 활기 넘치고 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연구위원은 도시민의 관계인구 확보에 중점을 둔 전라북도 관계인구정책을 도시민의 지역 관심과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단계는 관계형성단계, 2단계는 관계 성장단계, 3단계는 관계활성화단계로 단계를 거치며 점차 짐작적 정주인구로 성장하게 된다.

전북도는 관계인구정책 방향으로 ‘농촌에서 도시·도시민까지 확대하



24일 전주 리하호텔에서 열린 2022년 도민의 날 출향도민 초청행사에 김관영 도지사, 윤석정 전북 애향운동본부 총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장기철 재경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 전국 13개 출향단체 임원 및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 건강 지킨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예수병원·대자인병원 등 8곳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 8개소가 지정됐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전라북도 응급의료위원회 심사를 통해 2023년부터 3년 동안(2023~2025년)의 전북지역응급의료센터로 8개소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의료기관은 예수병원·대자인병원·전주병원·군산의료원·동군산병원·의산병원·정읍아산병원·남원의료원이다. 기존에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동일하다.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전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준에 지정된 8개 병원이 재지정 신청함에 따라 시설·인력·장비에 대한 현장평가와 운영계획서 및 응급실 진료실적 등을 평가해 결정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적정 개소수는 도 단위 인구 50만명 당 1개소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초과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주민 접근성과 인근 충청권의 의료지원 부족, 지역 생활권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법률에 따른 기준보다 많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재지정 되는 응급의료센터들은 전북도의 서남권, 동부권 및 충청권 응급 환자의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 수행과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부안 조류지 야생조류 AI 확진

전북도, 21일 동안 방역 내 농가 이동 제한 등 실시

도내 철새도래지 10곳 주변 3km 구간 특별관리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0일 부안 계화 조류지에서 재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최종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 시작 후 지난 10월 충남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2주만에 도내 야생조류에서 진단된 것으로 농장

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더해지고 있다.

검출지역에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해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하며, 방역대

(10km) 내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및 소독 강화조치가 21일 동안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닭·오리 농가에서 철새도래지 방문 차제 철저한 소독·죽사 입구 신발소독조 소독액 매일 교체 등과 같은 철새방역에 적극 참여한파동시에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